

국회 공백 ‘언제까지’...야 내홍에 원구성 ‘감감’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기약없이 늦춰져 6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회기를 종료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했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과 이후 있을지 모를 국회비준동의는 물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되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내홍을 수습하기 전까지 원구성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 역시 오는 25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

민주 “국회 정상화해야”...바른미래·평화당 동조 경찰청장 청문·북미회담 후속조치 등 현안 산적

할 예정이어서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퇴임한 뒤로 사실상 원내 현안에서 손을 떼고 선거운동에 몰두해왔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정 전 의장 고별회동이 열린 지난달 21일이 마지막이었다. 한 달째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우선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을 다음달 17일 제한절로 보는 분위기다. 만에 하나 국회의장 선출절차가 기약없이 지연될 경우 최다선인 한국당 서정원(8선) 의원이 의장을 대신해 70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발표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제한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기틀을 세운 뜻 깊은 날까지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국회도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과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흑시 있을지 모를 개각 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치러야 한다.

원구성은 이 모든 현안의 선결조건이다. 일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원구성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만 합의하고 선출은 이달 말이나 7월 초까지 늦추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생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원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처리에도 자발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내홍을 수습하고 원

구성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여야간 극심한 진통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총 3명인데 이 자리를 나눠야 하는 교섭단체는 4곳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두고도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6월 임시국회 개회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고, 제헌절 전까지라도 원구성을 마치면 다행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세미나 여야 5당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세미나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들, 중요정책 직접 브리핑하라” 이 총리, 국무회의서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의 경우 장관들이 담당 실·국장을 대동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3 지방선거 후 청와대 참모진이 가져야 할 자세로 ‘유능함·도덕성·겸손한 태도’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 특히 국민생활에 관련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한 뒤, 각 부처가 성과를 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할 정책과제를 국무조정실이 조정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책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느 경우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균형있게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들이 대국민 설명을 직접 행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며 “정책은 입안단계부터 대국민 설명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아동수당 사전신청 등 새로 시행하는 정책을 나열하며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경영 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들께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며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여성운동이 줄어든다는 다른 차원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여성을 겨냥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여성운동과 관련해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여성가족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요즘의 그러한 변화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깊게 인식, 더 유연하게 수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리는 총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총리·부총리협의회 갖고 올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및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관련 사항,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오는 22일 행정예고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안,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계획, 남북체육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등이 다뤄졌다.

/연합뉴스

남북, 7월 평양·가을엔 서울서 ‘통일농구’

내달 3~6일 남녀 혼합 친선경기 개최 아시아게임서 독도표기 한반도기 추진

남북이 평양과 서울에서 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당국은 지난 1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에서 7월 4일을 즈음해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남북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평양 경기는 남측에서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해 남북선수 혼합경기라

친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 남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전총련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회담 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통일농구경기는 7월 3-6일 사이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7월 4일은 1972년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 당국 간 첫 합의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역사적인 날이다. 이를 기념

해 이 무렵에 통일농구경기를 개최기로 한 것이다.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게임에 남북이 공동 참가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합의했다.

남북은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며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표기는 COR로, 깃발은 한반도기로, 노래는 아리랑으로하기로 했으며,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비롯한 종목별 국제 체육기구들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 수석대표는 “이번 아시아게임에서 사용할 한반도기는 독도를 표기해서 OCA에 제출하기로 남북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시아게임 공동참가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이며, 역대 국제종합스포츠대회 11번째 공동 입장이다.

2018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에도 참가하며 종목별 합동훈련과 경기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들은 오는 8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남북은 체육 협력·교류와 관련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남북연락사무소 준비인력 개성공단행 17명 경의선 육로 통해 오늘 재방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측 관계자들이 19일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현대산업개발 등 17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이날 오전 8시 31분 경기도 파주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과한 뒤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에 도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와 남북교류협력협회의 사무소 및 직원 숙소의 개·보수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이날 오후 5시께 귀환한 뒤, 20일 당일치기로

다시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 “당국자를 포함해서 공사인원들이(개성공단에) 상주하면서(개·보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시점에 대해선 남북간에 “조속한 시일 내”라고 합의했다면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천혜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인력들은 지난 8일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시설 대부분은 외관상 양호했으나 남북교류협력협회의 사무소와 직원 숙소는 지하층이 침수 상태였고 침수로

인한 일부 기계와 장비불능, 벽면누수, 유리파손 등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

정부는 교류협력협회의 사무소 등에 대한 개·보수가 진행되는 동안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에 임시사무소를 먼저 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의 남북정상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다. 이후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설치지역을 ‘개성공단 내’로 구체화했다.

/연합뉴스

민주, 전당대회 앞두고 ‘물 전쟁’ 시작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예비경선 ‘컷오프’ 거론

다. 이른바 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형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면서 차기 지도자를 수 있는 당대표가 뽑혀야 한다”며 “관리형이 아니라 민주정부 3기를 당·청이 공동으로 책임지면서 4기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도제도와 경선방식 및 컷오프 숫자들의 규칙이 후보자의 당권도전 여부는 물론 차기 지도부 구성의 향배에 큰 영향

을 끼친다는 점에서 ‘물의 전쟁’도 예고됐다.

최대 관심사는 오는 8월 이후 어떤 지도제도가 들어오느냐다.

일단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성 집단지도제제를 골간으로 하되, 기존처럼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럴 경우 여성·노인·청년 최고위원 선출은 없

어진다.

당대표 경선방식도 당권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이번 당대표 예비경선에선 2년 전 전당대회처럼 컷오프를 3명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할 경우 ‘2부 리그’인 최고위원 경선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컷오프 규칙마저 느슨하게 하면 최고위원 경선의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 흐르고 있다.

경선에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비율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다.

최근 권리당원이 많이 늘어난 만큼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오늘 당정청협...남북회담 후속조치 점검 서민경제 안정·최저임금 정책 개선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서민경제안정대책 등 핵심 현안을 두루 점검한다.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정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부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여권이 선거압승을 토대

로 하반기 국정운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남북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 추진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민경제 안정대책도 다뤄진다. 규제·금융개혁 대책을 포함한 혁신성장 세부 추진계획 역시 주요 안건이다.

당·정·청은 또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점검한다.

최저임금 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선 방안 등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노동현안 대책, 기재부가 구상하고 있는 내년도 재정융역전락과 예산편성 계획도 테이블 위에 오른다.

/연합뉴스